



그 많던 파이는 누가 다 먹었을까?

- 생산성과 임금 증가율 격차 확대



2013.11.25 | 여경훈_ 새사연 연구원 | noreco@korea.ac.kr

“재물에 대한 불공평한 분배는 사회적 악을 양산하였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울부짖게 만들었다. 가난에 맞서 싸워야 한다. 불평등에 무감각한 채로 남아 있는 것은 빈부격차를 키울 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생산성과 임금 증가율 격차 확대

최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함께 주목받는 것이 생산성과 임금 증가율의 괴리 현상이다.¹⁾ 생산성과 임금은 경제성장을 통해 노동자들이 얼마나 이득을 받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다. 생산성은 생계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실질임금은 구매력, 즉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생계수준 향상의 물질적 기반을 노동자가 제공했음에도, 그 과실의 수혜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변수 간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얻은 수혜의 파이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분배율 하락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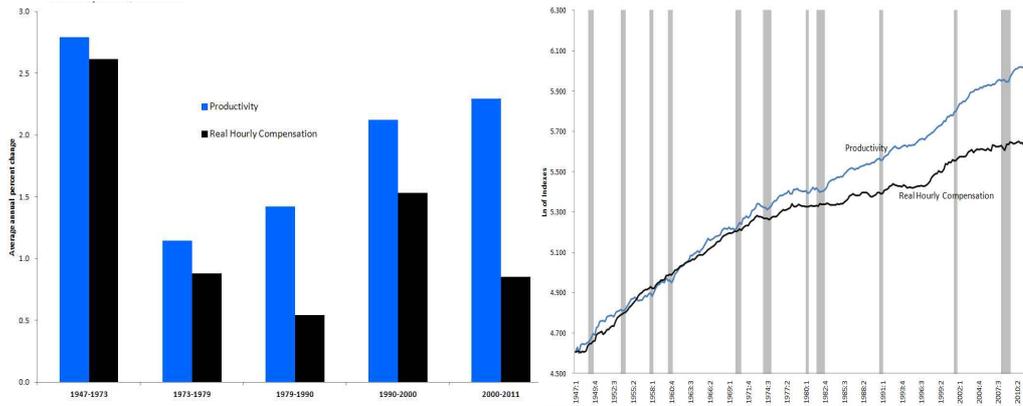
예를 들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 1)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생산성과 임금증가율 괴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평균 피용자보수를 취업자 당 총생산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되며, 비용 측면에서는 실질단위노동비용으로 부르기도 한다. 즉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만큼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분배율이다. 따라서 식을 간단히 변형하면 분모는 평균임금, 분자는 노동생산성이 되기 때문에 평

균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떨어지면 분배율은 하락하게 된다. $\frac{wL}{EY} = \frac{w/E}{Y/L}$; w(피용자보수), E(피용자), L(취업자), Y(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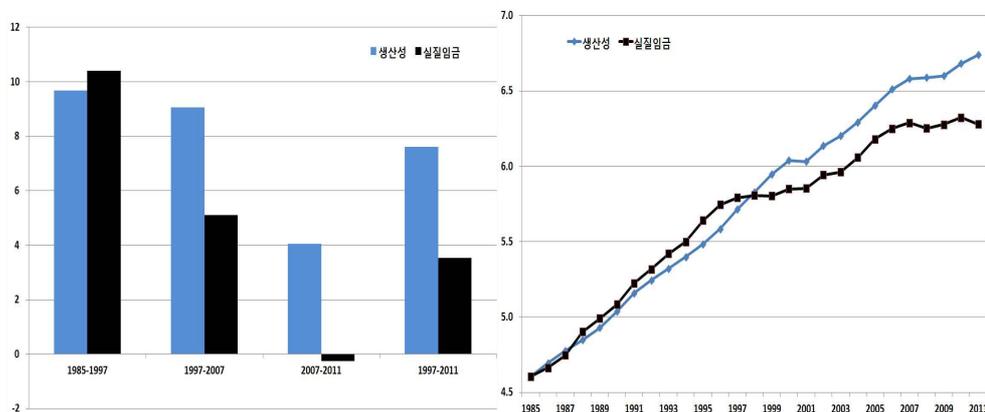
[그림1] 미국의 생산성과 임금 증가율 격차 확대(1947-2012)946~2009



*인용: US BLS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1947~73), 미국에서 생산성(2.8%)과 실질임금(2.6%)의 증가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위 그림에서 파란색(생산성)과 검은색(실질임금)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같이 올라간다.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두 변수의 증가율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만 보면, 생산성은 연평균 2.3%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불과 0.9% 늘어나는데 그쳤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실질임금은 거의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데, 생산성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이윤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버블이 회자될 정도로 미국 주가가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가 본격 시행된 1980년 이후만 보면, 생산성은 지난 20년 동안 85% 증가하였다. 반면 실질임금은 36%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그림2] 한국 제조업 생산성과 실질임금 증가율 격차(1985-2011)



*자료: US BLS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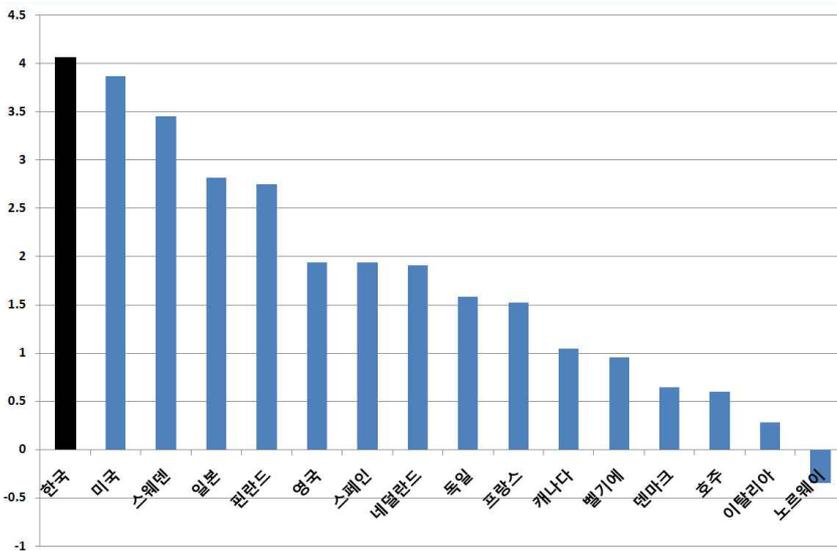


위 [그림1]과 [그림2]를 비교하면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을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생산성과 실질임금을 지수화(기준년도=100; 미국=1947, 한국=1985)하였다. 그 다음 자연로그로 바꾸어 시기별 증가율(기율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50~2011년 미국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698%다. 1985~2011년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746%를 기록하였다. 2차 대전 이후 60여 동안의 미국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한 규모보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 폭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1985~97년) 실질임금 증가율(10.4%)이 생산성 증가율(9.7%)보다 0.7%p 높았다. 그러나 위기 이후(1997~2011년) 실질임금 증가율(3.5%)은 생산성 증가율(7.6%)보다 4.1%p 낮았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실질임금 상승폭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MB 집권 4년(2007~2011년) 동안 생산성 증가율은 4% 대로 푹 떨어졌고, 실질임금은 오히려 0.2% 감소하였다. 두 차례 큰 경제위기는 생산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실질임금 추세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비교 가능한 OECD 16개 국가의 연평균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 차이를 계산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다.²⁾

[그림3] 생산성-임금 증가율 격차(1985-2011)



*자료: US BLS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선진국 15개 국가에서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에 실질임금 증가율이

2) 노동생산성을 계산하는 여러 측정 방식이 있다.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생산성이 가장 정확한 방식이다. 노동시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인당 생산성을 사용하기도 한다. 위 16개 OECD 국가에 대한 생산성-실질임금 갭은 미 노동부의 시간당 생산성과 시간당 실질임금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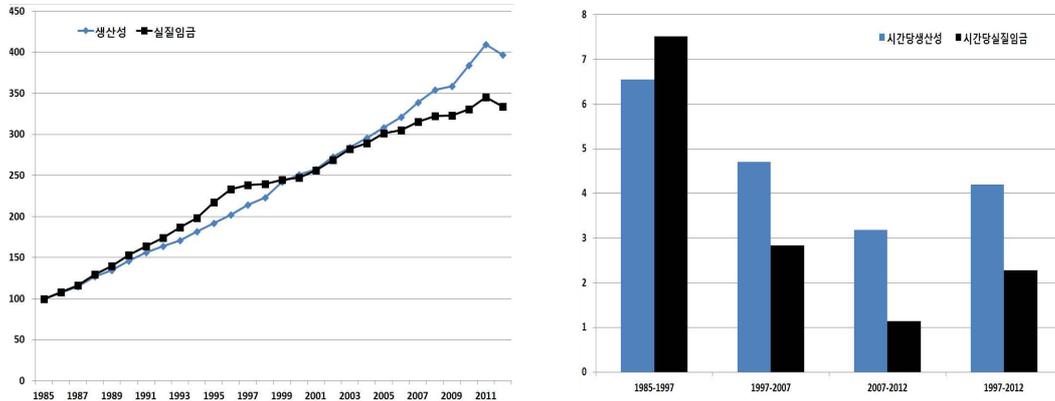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의 세계적 추세와 일치한다. 우리나라는 그 간극이 연평균 4.1%로 가장 심각하였다. 같은 기간 노동소득 분배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달리 말해, 노동자들은 경제 활동을 통해 기여한 만큼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몫은 고스란히 기업에 귀속되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은 그만큼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실질임금 증가율을 비교해도 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더 높았고, 위기 이후 실질임금 증가율이 정체되었다. 두 변수의 증가율은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림4] 경제 전체 시간당 생산성-실질임금 증가율 격차(1985-2012)



*자료: OECD,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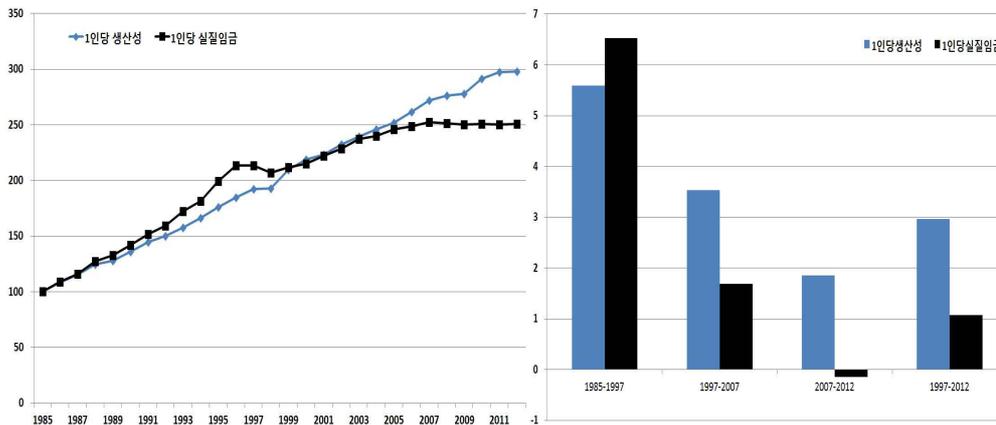
외환위기 이전(1985~97년)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7.5%)이 생산성 증가율(6.6%)보다 0.9%p 높았다. 그러나 위기 이후(1997~2012년) 실질임금 증가율(2.3%)은 생산성 증가율(4.2%)보다 1.9%p 낮았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실질임금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MB 집권 5년(2007~2012년) 동안 생산성 증가율은 3.2%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은 불과 1.1% 늘어나는데 그쳤다. 작년 시간당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1인당 노동시간이 2090시간에서 2163시간으로 3.5%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당으로 환산해도 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인당 실질임금 증가율(6.5%)은 외환위기 이전 생산성 증가율(5.6%)보다 0.9%p 높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실질임금 증가율(1.1%)은 생산성 증가율(3.0%)을 크게 하회하여 격차는 1.9%p로 확대되었다.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MB 5년 1인당 실질임금 증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0.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와 무관하게, 실질임금 증가율은 두 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두 지표 간 격차 확대는 노동소득 분배율의 추세적 하락으로 나타났다. 분배란 경제적 파이가 노동자에게 얼마나 귀속되는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분배율 하락은 생계수준 향상의 물질적 기초(생산성)를 노동자가 제공했음에도, 그 과실의 수혜(실질임금)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림5] 경제 전체 1인당 생산성-실질임금 갭(1985-2012)



*자료: OECD, 한국은행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OECD를 비롯한 주류적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ILO 등의 비주류 시각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후자의 관점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논하고자 한다.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왜 소득불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주류적 시각은 주로 기술 변화에서 찾는다. 1980년대 초반 이후 기술변화는 정보기술 등 숙련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소득이 증가하고 비숙련 노동자는 감소하여 불평등이 확대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주로 지니계수 등 개인 간 소득불평등 확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대한 분석은 주류경제학의 자본과 노동의 대체를 응용한 고용의 구성 측면에서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즉 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전체 분배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한다. 정보기술 등 자본집약적 분야에서 수요와 소득이 증가하고, 이 부분의 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배율도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ILO(2010)나 OECD(2012) 등의 연구에 따르면,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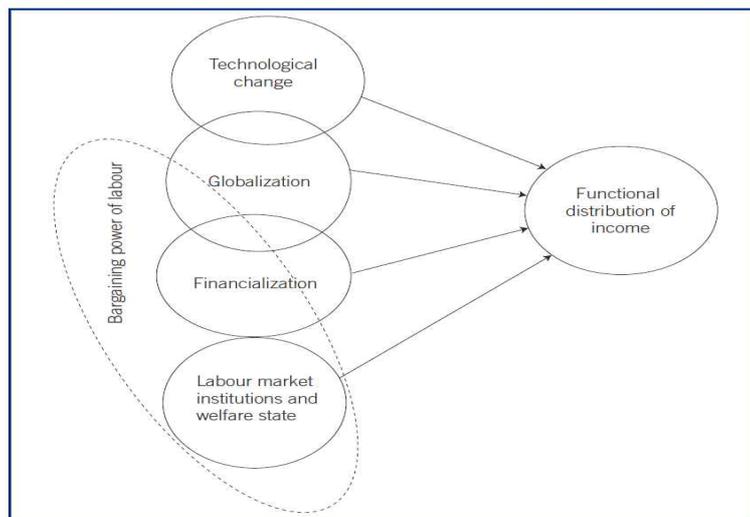


1990~2007년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은 산업 내부의 분배율 하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혀지고 있다.³⁾

세계화를 주요 설명 변수로 삼기도 한다. 고전적인 무역이론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지닌 국가가 그 부문에서 이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은 자본가가 이득을 얻고, 개도국은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노동소득분배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히려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해외이전 등 위협 효과가 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협상력’ 관점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한편 ILO(2013)에 따르면, 분배율 하락의 유력한 용의자(usual suspects)로 아래 그림과 같이 다섯 가지 요인을 거론하고 있다. 기술변화, 세계화, 금융화, 노동시장 제도와 복지국가,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 약화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의 협상력은 주로 노동시장 제도, 복지국가, 그리고 금융화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세계화는 자본으로 하여금 국내와 국외 투자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장 해외이전으로 자본의 협상력이 늘어난다.

[그림6] 분배율 하락의 제도적 요인들



*인용: ILO(2013)

경제의 금융화가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3) ILO(2010), Global Wage Report, OECD(2012), Employment Outlook,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The Decline of the U.S. Labor Share)에서 미국의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을 분석한 결과, 가격경쟁이 심한 제조업과 무역 부문의 공장 해외이전(off-shoring)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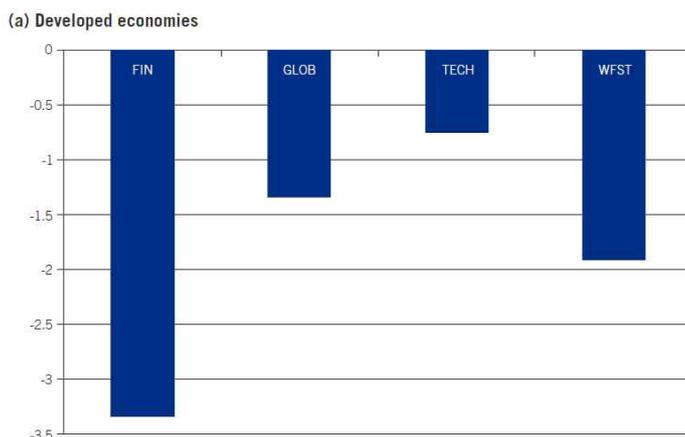
첫째, 금융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에 더 많은 선택권(option)을 부여하게 된다.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투자할 수도 있게 되었다. 즉 투자의 대상과 지리적 위치에서 과거보다 선택권이 늘어났고, 이는 노동자의 협상력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단적인 예로 현대자동차로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천문학적인 이윤으로 증권사를 설립하고 국내보다는 해외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에도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사모펀드나 투기자본의 M&A 시장 진출 확대 등은 공격적인 비용 삭감을 통해 노동자의 협상력을 떨어뜨렸다.

노동조합과 복지국가의 약화도 노동자의 협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비정규직을 대량적으로 양산시켜 노조를 내부로부터 분열, 약화시켰다. 또한 최저임금, 실업수당, 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침식시키는 기제로도 작용하였다. 실업수당이나 사회임금 등 복지국가 요인도 분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복지지출이 하락하면 노동자가 최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 수준, 이른바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이 하락하기 때문에 분배율은 떨어진다.

실제 ILO(2013)의 31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분배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을 금융화로 밝혀졌다. 분배율 하락에 대한 금융화의 기여율은 46%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노동시장 제도와 복지국가의 약화로, 이는 2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세계화와 기술변화가 각각 19%,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LO의 연구 결과는 기존 OECD 등의 분석에서 분배율의 추세적 하락의 원인을 이해함에 있어, 금융화의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림6]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요인 분석



*인용: ILO(2013); 금융화(FIN), 세계화(GLOB), 기술변화(TECH), 노동시장(WF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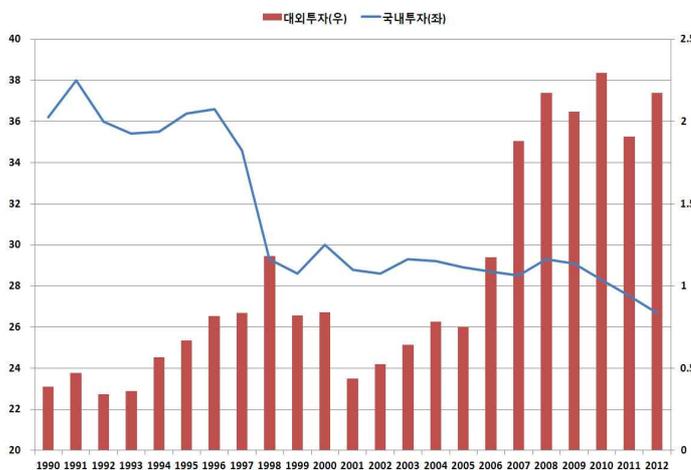


공평한 성장,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금융규제강화

실질임금 증가율이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면 단위노동비용이 하락하고, 이는 기업의 비용절감으로 이어져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주었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만약 이윤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면 노동자 개개인의 실질임금이 줄어들더라도 생산에 비해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면 분배율은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19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모토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김영삼이 말하는 세계화는 국가경쟁력이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이루기 위해 고통분담 명목 아래 임금억제를 강요하였다. 박정희 시대의 수출주도 성장정책은 김영삼 시대에 임금억제를 통한 국가경쟁력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사실은 재벌주도 성장정책이었다.

[그림7] GDP 대비 국내·국외 투자 비중 추이(1990-2012)



*자료: 한국은행

분배율이 하락하고 기업의 이윤이 늘어났지만, GDP에서 국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38%에서 2012년 26.7%로 줄어들었다. 국내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해외투자 비중은 1990년 0.4%에서 2012년 2.2%로 증가하였다. 2001년 22억 달러에 불과하던 해외투자 금액은 작년 246억 달러로 11배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의 이윤을 늘려야 투자가 증가한다.”는 명제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991년 34%에서 2012년 22%까지 인하해 주었다. 오로지 기업 잘 되라고 엄청난 혜택을 베푼 것이다. 그런데 정작 혜택을 받아 세후순이익을 늘린 재벌 대기업은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에 더 치중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계의 소득 정체로 수요가 부족한 내수시장보다 해외시장을 더 공략하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부문의 천문학적인 이윤에 따라,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어섰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고용은 지난 4년 동안 15만8천명에서 27만 명으로 71%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창출된 고용은 불과 8%에 불과하였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천문학적 이윤으로 미국, 터키, 중국 등 해외 공장을 연달아 건설함에 따라 국내 생산 비중은 2005년 73%에서 작년에는 43%로 떨어졌다.⁴⁾

우리는 지난 해 대선 과정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물론 현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경제민주화를 내팽개치고 있다. 지난 5년 MB정권의 실패가 반복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다.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1%에 과실이 귀속되는 경제구조에서 가계는 성장을 체감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분배문제만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공평한 성장(equitable growth)이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이나 기득권이 아니라, 산출물 생산에 기여한 모든 계층에 돌아가는 성장을 말한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금융규제강화는 공평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기조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더욱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보와 싱크탱크의 몫이다. 

4) 파이낸셜타임즈(11/18), South Korean companies: Needed on the home front



2013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3년 11월 26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2/7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김병권
이슈진단	2/15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김수현
이슈진단	2/22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다	최정은
이슈진단	3/9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김병권
이슈진단	3/11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여경훈
이슈진단	3/11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김병권
이슈진단	3/13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3/18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 보는 경제 민주화	김병권
이슈진단	3/23	유럽의 숨겨진 분단국가 키프로스의 비극	김병권
이슈진단	4/2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최정은
이슈진단	4/3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김병권
이슈진단	4/11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김병권
이슈진단	4/24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최정은
이슈진단	5/2	전 세계를 속인 엑셀 불황	여경훈
이슈진단	5/9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6/7	메디텔,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이은경
이슈진단	6/12	험난한 고용률 70%의 길과 고용의 ‘질’	김병권
이슈진단	6/17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 고령화	여경훈
이슈진단	6/27	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김수현
이슈진단	8/13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여경훈
이슈진단	10/8	인구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전망	여경훈
이슈진단	10/11	2014년 정부예산안 평가: 보육 및 일가정 양립 부문	최정은
이슈진단	10/14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는 이유	김수현
이슈진단	10/24	동양 사태는 왜 발생했는가?	여경훈
이슈진단	10/31	동양 사태가 보여준 재벌 개혁의 필요성	김병권
이슈진단	11/04	지뢰밭 속의 순항? : 2014년 경제 전망	정태인
이슈진단	11/05	유아 공교육, 사교육에 잠식되다	최정은
이슈진단	11/07	여전한 성별임금격차 문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김수현
이슈진단	11/11	대한민국 협동조합 현 주소 : 지역, 연령, 유형별 분석	김병권
이슈진단	11/15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과 부동산 책 방향	김병권
이슈진단	11/26	그 많은 파이는 누가 다 먹었을까? - 생산성과 임금 증가율 격차 확대	여경훈